

데스크 시각

박진현
문화·예향국장

너희가 문화를 아느냐

지 않았다. '문명의 이웃들'을 주제로 목포, 진도, 해남 일대에서 분산 개최된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44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지만 전시 기간 동안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를 끌어들이는 마케팅을 발휘하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기획한 '2024 허백련미술상 수상작가전-시정유묵(市精幽墨)', 지금-여기'는 수목비엔날레 관람객을 미술관과 광주의 관광명소로 연계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지 못해 상생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새해 벼우부터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지역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수백 만 명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숙의없이 밀어부치는 '속도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지방 소멸위기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양 시·도의 행정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을 발표하면서 가칭 '전남광주특별시'(광주특별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실제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현실화되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된다. 청년 인구 유출 등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인구 320만 명의 호남권 메가시티 탄생은 지역의 미래를 바꿀 신호탄이 될 것이다.

분명하다. 무엇보다 아시아문화하브를 꿈꾸는 광주와 예향의 본류인 전남이 의기투합하면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상생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 통합'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K-컬처 시대'를 선도하는 '남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연계해 광주특별시에 국립 문화예술기관이나 단체를 우선 배치하는 카드가 그 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관광 2035' 정책에 따라 산하의 '서울

예술단'을 '국립아시아예술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2026년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이전하기로 했지만 '공론화 부족' 등을 내세운 서울예술단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역사적인 '행정통합' 흥하려면

사실, 지난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ACC는 360만 명의 방문객(2025년 기준)을 기록했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서울 예술의전당에 비해 전시·공연 기동률이 낮은 편이다. 7개의 복합전시관을 거느린 핵심 시설인 문화창조원의 경우 ACC 미래운동회, 놀이 아케이드, 봄의 선언전, 애호가 편지전, 뉴욕의 거장들전 등 평균 6~7개의 전시(2025년 기준)만 열려 '공간'에 비해 콘텐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아시아예술극장 역시 '비어 있는 날'이 더 많아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은 애호가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ACC의 서울예술단 유치도 부족한 상설 공연을 채워넣기 위한 궁여지책 가운데 하나다. 또한 광주시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민주화역사관의 광주 이전을 추진중이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다.

마지 않아 행정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 광주·전남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걷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지 모른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내딛는 도전이 광주·전남의 브랜드로 꽂을 피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국립 문화기관의 지방 이전 그리고 양 시·도의 밤상 전환에 어우러져야 한다. 특히 문화를 주축으로 미래 청사진을 그려야 함은 물론이다. 분명, 원플러스 원(1+1)의 가치를 뛰어넘는 폭발적인 시너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너지 못 살린 두 비엔날레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광주에서의 접근성은 더 열악했다. 거장의 명화를 '직관'하기 위해선 고속버스나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는 탓에 일부 관람객들은 '원정 나들이'를 포기해야 했다. 게다가 광주비엔날레가 열리지 않는 비시즌 기간이나 보니 미술 애호가들을 광양으로 불러들이는 특수 조차 기대할 수 없었다.

지난해 8월 열린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도 별반 다르

온펜칼럼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시·도 행정통합 후 광주시, 해체냐 확대냐

가까울 것이다. 통합단체장은 산업·에너지·AI·교통·국토균형발전 등 지역의 중요 프로젝트와 광역 정부 내사·군·구 역할 조정, 정부 및 기업과의 교섭 등의 역할을 떠맡게 될 것이다. 대신 시·군·구의 행정은 군공항 수용 문제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냈던 무안군수처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수행할 것이다.

광주전남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광주전남특별시-5개 구라는 2단계 행정구조만 존재한다. 한마디로 광주시라는 행정단위가 사라진다. 140만 광주시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 교통, 상하수도, 관광, 정부 및 기업과의 교섭 등에서 통합적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광주라는 행정단위와 광주시장이라는 자리 를 공증분해 시켜 놓고 이게 가능하겠는가? 천 이상의 역사와 1980년 5·18 광주항쟁을 통해 세계적 위상을 가진 도시, 하나의 생활권인 도시를 갑자기 5개 단위로 인위적 분할을 하는 행위는 '광주와 전남은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합쳐야 한다'는 통합의 기본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존의 지방자치법과 2단계 지자행정 구조는 중앙정부 중심 시대의 유물이다. 향후 과제는 시도 행정통합 및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준) 정부 수준으로 승격시켜 5국 3특 체제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럼 지방행정 체계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대목에서 지역균형 및 지방분권의 모범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를 국가의 대도시 지방행정은 대부분 주(도)-시·구의 3단계 구조를 취하고 있다. 흑자는 광주시를 존속시키면 옥상옥의 모양새가 되고, 명칭이 중복되어 통합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에게 미국 뉴욕주-뉴욕시-5개 구라는 3단계 지방 행정의 사례, 혹은 독일 브레멘주-브레멘시-5개 구라는 3단계 모델을 소개하고 싶다. 뉴욕시 규모가 크고 명칭이 중복된다고 해서 뉴욕시가 뉴욕주의 위상을 해치지 않는다. 브레멘시가 브레멘주의 거의 전부이지만 비능률적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게 지방분권의 진정한 모습이다.

광주 정치권은 광주전남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이 광주시를 분해,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고 광주정신 역시 더 큰 승화를 이룰 것이라고 미화하고 있다. 그 주장은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이를 배반적이다. 광주정신은 지지처럼 광주가 중심이 되고 전남이 함께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계승된다. 순천, 여수, 목포, 진도군 등 전남에 있는 각 지역도 모두 각각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독자적인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 시도 통합은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과 특징을 존중하면서 통합, 상생, 협력하는 것이지 결코 어느 특정 지역의 확대나 흡수가 아니다. 확대, 흡수를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상이다.

남은 시간이라도 치열한 토론을 통해 통합법 초안의 실상과 협상을 구분해 내자.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지방자치법도 개정하자. 광주 문제를 광주전남특별도-광주시-5개 구의 3단계 차지 형태를 취하는 방향에서 해법을 찾자. 그것이 1000년 역사 광주와 광주정신 그리고 동일생활권은 동일 행정체계라는 상식적 원리를 존중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통합 후 발생할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광주전남이 좋은 모델을 출시해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에도 좋은 시사점을 던지자.

기고

김효중
시랑실은 노래봉사단 단장

나눔은 계속된다

지시설에 찾아가 노래로 봉사하는데 지금까지 모두 548번의 공연을 진행했다. 성금, 물품, 공연행사 지원 등으로 약 10억원을 후원했다.

공공기관 등의 지원 없이 자비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30년 넘게 행사를 진행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초기에는 어바이날, 추석, 설날, 연말 등 1년이면 4차례 씩 12곳에서 행사를 열었지만 정년퇴직을 한 후에는 아쉽게도 어바이날과 추석 두 차례만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가 너무 어려워 연초에 어바이날 공연에 포커스를 맞추고 추석 공연은 장담할 수 없을 상황이었다. 어바이날 공연에서 환하게 웃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자 추석 공연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 열심히 밤품을 팔았고, 필자를 믿고 응원해준 후원자들이 심시일반 도움을 주면서 추석 공연도 진행할 수 있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남을 생각하며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행사를 진행할 때면 꼭 후원자들을 초청하는데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신이 보낸 작은 정성으로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며 뿌듯해

한다.

올해 귀일원 민들레집에서 열린 추석 공연에는 채나리, 최진필, 나혜진 등 가수들과 이카루스 안무단 등이 참여해운 무대를 선사했고 20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도 전달했다.

주변을 돌아보면 올해도 지역 경기는 좋지 않은 것 같다. 줄곧 후원을 해주었던 건설업체들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생각해보면 늘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적은 액수라도 손에 쥐어주며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은 후원자들이 많았다. 그런 분들의 작은 정성을 모으고 또 우리 단원들이 더 마음을 합쳐 무대를 꾸민다면 어려운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의 밝은 얼굴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수십년 사랑실은 노래봉사단의 공연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다.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베푸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받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이다.

올해도 가족들이 사랑을 전하는 어바이날과 민족 대명절인 추석날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무대를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나눔은 계속된다.

社說

광주전남 통합 명칭 합의… 갈등 불씨는 여전

지역 정치권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갈등 요소 중 하나인 명칭 문제를 해결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이 네 차례 만남 끝에 통합 특별시의 명칭과 정사 소재지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인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합의안에는 광주전남 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한다는 것과 통합 청사는 전남 동부·무안·광주 등 세 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며 일단 주사무소(주청사)는 정하지 않고 7월에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에 두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갈등 요소인 명칭 문제를 일단락 처리한 특별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 보완을 거치고 중앙정부와 협의도 이뤄지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2월 안으로 특별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넘어야 할 하들이 괴롭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심 갈등 요소인 명칭 문제를 일단락 처리한 특별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 보완을 거치고 중앙정부와 협의도 이뤄지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2월 안으로 특별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넘어야 할 하들이 괴롭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할 예정인ade 자신의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3개 사무소 가운데 하나를 주사무소로 하자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명칭 문제를 매듭 짓고 행정통합이란 꽃을 풀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당장 오늘부터 특별법 발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들어간다. 특별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 보완을 거치고 중앙정부와 협의도 이뤄지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2월 안으로 특별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넘어야 할 하들이 괴롭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민투표 대신 광주시와 전남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데 통합 의회 구성이나 의원 정수 확대 여부를 놓고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보다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주민투표 대신 의견 청취를 선택한 만큼 지역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대승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광주도서관 봉고… 감리 등 총체적 부실 확인

광주대표도서관 봉고는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철골 구조물(트러스) 용접 불량과 콘크리트 타설 미숙으로 인한 균열 등 공사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와 감리단과 광주시의 허술한 관리가 빚은 참사라는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가 입수한 감리보고서에 따르면 측벽한 공기를 맞추려고 속도전을 벌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꾸준히 제기한 문제였는데 감리보고서에 '부진 공정 만회 대책'이란 이름으로 속도전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봉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되는 봉고 지점 철골 구조물과 콘크리트 타설 공사 검사서에 모두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감리단의 보고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참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원인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고 원인 규명에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동원 가능한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수사 속도가 너무 늦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고 원인 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길 바란다.

無等鼓

인공지능에게 광주전남 공동 빛기암혁신도시를 물으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조성했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한 혁신 성장 핵심 거점이다'고 답한다.

노무현 정부는 광주전남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을 위해 전국에 '혁신도시'를 지정했고 광주·전남은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광주지자체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나눠 이전했는데 광주와 전남은 각각 한 곳이 아니라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최대 규모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이 나주로 옮겼고 광주와 전남은 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전남지역 한 인사의 증언에 따르면 빛기암혁신도시 탄생 배경에는 상생을 위한 '통 큰 양보'가 있었다고 한다. 광주시 입장에서는 광주 뿐만 아니라 나주에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부담이 커졌고, '대기'를 전남도에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았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풍부한 정치 경력 때문에 상황에 대처해 나선 전남도 관계자들이 긴장했지만 박 시장은 통 크게 '상생과 협력'을 강조했다고 한다. /오광록 서울취재본부부장 kroh@

혁신도시 정신

광주시는 '광주의 소리'만 내고 전남은 '전남의 소리'만 높이기 때문에 벌어

光州日報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편집국내부 220-0649 | 문화부 220-0624 | 경영자 220-0515 | 문화사 220-0541

정치부 220-0634 | 예향부 220-0692 | 기획부 222-8005 | FAX 222-0195

경제부 220-0648 | 여론매체부 22